Monthly Publicness

월간 공공성

2023년 12월 창간호

공공성 중심 공공사회

[공공성실천, 인물탐구]

경기도의회 정윤경의원

2023년 공공성강화를 위해 '발로뛰며' 걸어온 길/편집자

[공공성강화를 위한 말과 행동]

서운석/안민석/송주명

학사모/김상돈/이은수

[2023 대한민국공공성실천대상 수상자의 실천사례]

박정/성일종

정윤경/김규창/이연희

황소제/유진선

(사)한국공공사회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ociety

월간 공공성

창간호(통권 1호)
2023.12.

(사)한국공공사회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ociety

월간 공공성을 여는 사람들

김상돈

고려대 겸임교수
(사회학박사)
010-9120-1323

이승훈

숙명여대교수
(사회학박사)
010-2941-5528

서운석

보훈교육연구원 선임연구원
(행정학박사)
010-9214-8565

이용을

한국공공사회학회
부회장
(철학박사)
010-9270-5637

작가

유세희

아크랩(ARC Lab)대표
010-2718-7106

디자이너

진현주

빅식스방과후교육연
구소 이사
010-9060-7972

청년칼럼니스

고해연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haeyeon0727@gmail.com

과학칼럼니스트

정희윤(일명 정디슨)

방송인

010-5555-6555

월간 공공성 / 2023년 12월 창간호(통권 1호)

[월간 공공성] 발간사 / 편집인 일동 7

[공공성실천, 인물탐구]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2023년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발로 뛰며' 걸어온 길 / 편집자 11

[공공성 강화를 위한 말과 행동]

회의와 공공성에 대한 고찰 /서운석 박사 23

국회의원 안민석이 제안하는 공공성 강화의 목소리 / 국회의원 안민석 31

지식교육프로그램의 시장, 에듀테크 진흥방안에 대한 송 교수의 견해 / 송주명 교수 41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논평 / 학사모 45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가 탄소중립실천에 맨앞에 나서다 /이은수 대표 49

≪월간 공공성≫ 창간호가 선정한 "공공성 강화 1호 대동법", 잠곡潛谷 김육 선생을 만나다! / 김상돈 교수 61

[대한민국공공성실천대상]

2023 대한민국공공성실천대상 수상자의 실천사례(1부)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성일종, 경기도의원 정윤경, 경기도의원 김규창, 충남도의원 이연희, 광주시의원 황소제, 용인특례시의원 유진선 79

월간 공공성
Mopthly Publicness

〔발간사〕

우리는 오늘 시민과 함께 "**공공성 중심 공공사회**"를 구상하고 실천해 나갈 ≪월간 공공성≫을 발간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 동안 식민지,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거치며 다른 국가에서 일찍이 겪지 못한 거대한 전환을 역동적으로 극복해가며 세계 10위 경제국의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3·1혁명(운동)에서 2016년-2017년 촛불혁명까지 100년에 걸친 시민혁명의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로 도약했고,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여전히 부패와 특권의 사슬, 이념 갈등과 분단의 장벽,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에 가로막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삐 풀린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속화한 경제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공공성위기와 공동체 붕괴, 지방소멸, 저출산·고령화, 생태공동체 파괴와 기후위기,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저성장과 저고용, 노동 없는 자본주의사회의 시대적 난제가 큰 장애물입니다. 시민의 권리는 더디게, 시장의 권력은 빠르게 확대되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주소입니다.

2023년 12월 오늘, 한국 사회와 지구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와 평화를 향한 시민들의 오랜 노력은 거대한 시련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됐고, 그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고 가계소득이 감소해 국민들은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와 공공성 중심 공공사회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폭발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대면하고 있는 제반 사회문제와 정면으로 맞대결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성 중심 공공사회'라는 민주적 해법을 들고, 한국공공사회학회는 ≪월간 공공성≫의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2012년 1월 23일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한국공공사회학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공공성을 성찰하고 실천하는 한국공공사회학회가 발간하는 한국연구재단 KCI 등재지인『공공사회연구』에 이어 ≪월간 공공성≫을 발간합니다.

≪월간 공공성≫은 공익(사회적 기본권), 공민(시민덕목),공개(의사소통 민주주의), 그리고 소득양극화와 사회 불평등에 대항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능구能久(지속가능), 능진能盡(온전히 발현),능화能化(새로운 변화)를 구현하는 전문잡지입니다. ≪월간 공공성≫은 '삼공사상(공익,공민,공개)'과 '삼능실천(능구,능진,능화)'을 지향합니다.

≪월간 공공성≫은 '공공성 중심 공공사회'의 구상을 시민과 함께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인간, 시장, 자연 등의 고유한 특성이 무시된 채 효

율과 경쟁의 원리로 노동, 토지, 화폐를 상품화시킨 결과, 삶의 다양한 가치가 왜곡 파괴되었고, 공공성과 공동체의 활력과 뿌리까지 잠식하였습니다. 따라서 ≪월간 공공성≫ 은 시장 경제를 포함한 모든 사회 영역들이 저마다의 역할을 맡아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 새로운 '공공성 중심 공공사회'를 시민과 함께 구상할 것입니다.

공공성의 위기는 일상의 위기이며, 일상의 위기는 곧 공공성의 위기입니다. 2023년 오늘, 우리가 대면했고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19의 위험을 비롯한 제반 사회문제도 이러한 의미에서 "공공성 위기로 인한 복합적 위험"입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 또한 공공성의 지평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월간 공공성≫은 사회적 기본권, 시민덕목, 의사소통 민주주의에 대한 '공공성 중심 공공사회' 실천의제들을 사유하고 실천하며,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에 기반 한 진정한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작은 씨앗이 되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을 때 까지 ≪월간 공공성≫은 쉼 없이 발간할 것입니다.

2023년 12월

≪월간 공공성≫을 여는 사람들 일동

월간 공공성
Monthly Publicness

〔공공성 실천, 인물 탐구〕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2023년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발로 뛰며' 걸어온 길 / 편집자

"당신은 잠시라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그 말의 실천'에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정윤경 의원이 매일 자신과 대화하는 혼잣말)"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3선 도의원(군포 1,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정윤경 의원은 '도의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항상 이렇게 정의합니다. "도의원의 가장 큰 역할은 예산심사입니다.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하고 적시 적소에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활력의 자양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정의합니다. 필자가 겪어 본 정윤경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더 듣고 뛰는

열심히 일하는 의원입니다.*

정윤경 의원은 군포중앙고등학교 운영위원, 헝겊원숭이운동본부이사, 기본소득국민운동 군포본부 상임대표,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주임교수를 역임하기도 하였습니다. 정 의원은 초선의원(2016.2-2018.06)시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재선의원(2018.7-2022.6) 시절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발로 뛰며'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정 의원은 현재 제11대 경기

* 2021년 5월 어느 날, 편집자와 정윤경 의원의 첫 만남은 군포 산본시장 길거리였다. 정 의원은 당시 공청회를 마치고 길거리에서 주민에게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던 중이었다. 편집자가 의원님! 여러 번 불렀지만, 주민과의 대화가 끝나고 나서야 누구세요? 라고 묻던 광경이 새삼 기억이 난다. 정 의원의 첫 인상은 매우 열정적이고 진실하였다. 그동안 알고 지냈던 의원들과는 사뭇 달랐었다. 지금의 정윤경은 열정과 진실성에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발로 뛰며 열심히 공부하는 의원'일 뿐이다.

도의회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3선 도의원이자 경기도민의 대변인으로 칭합니다. 필자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 '경기도의 품격, 경기도민의 대변인'이라고 부릅니다. 정윤경 의원이 2023년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민만 바라보고 달려온 그 길을 정 의원의 인터뷰를 통해 톺아보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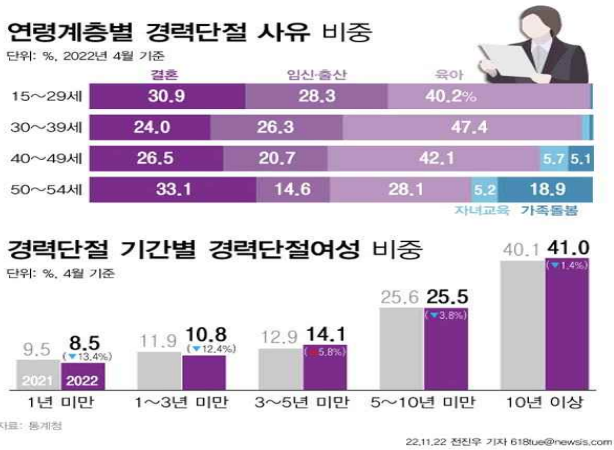
편집자 : 의원님! 안녕하세요! 2023년 공공성 강화의 첫 시작이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 공청회 개최가 그 출발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진행 과정과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정 의원 : 상위법인 「여성경제활동법」의 2021년 전부개정 사유는 기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에서 경력단절 예방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이었습니다. 그 뜻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인력을 '경력이 단절된 상태'가 아닌 **'경력을 보유한 상태'**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였고,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개선을 선제적으로 견인해야 합니다" 라고 논의가 시작된 것이

2023년 1월에 개최한 입법 공청회로 기억됩니다.

편집자 : 의원님께서 노력한 결과, 지난 2월 14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되어 3월 6일에 공포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정 의원 : 2021년 시행된 '필수업무종사자법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로 지목되는 돌봄노동'이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노동으로 규정되는 등 돌봄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그 가치가 재조명되는 실정입니다. '경력단절여성법'이 초래한 정책적 한계와 그 문제점을 타파하고, 여성 노동력 대한 범사회적인 인식개선을 선도해 '여성경제 활동법'과 현행 경기도 조례의 입법 목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함에 있어서 경기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편집자 : 의원님! 지난 3월 29일 군포시 가족센터에서 열린 '군포시 1인 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관련 점검 회의에 참석해 사업의 추진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셨던 회의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정 의원 : 1인 가구를 비롯해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시민이 혼자 병원에 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령층이나 부상자의 경우 병원 동행이 절실한데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가 시작되어 매우 다행입니다. 또 이용자 만족도가 만점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 서비스가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관련 인력이 운영자 1명, 동행인 2명에 불과해 이용자의 수요를 맞추기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추후 동행인 인력 추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편집자 : 지난 4월 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셨죠? 그 공청회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조례제안 이유도 설명하셨을 텐데, 관련하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의원 : 방과 후 활동은 1996년 시작된 이래 지난 20년간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방과 후 강사의 계약 형태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으로 계약은 1년 이내, 총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공모절차를 다시 실시하는 등 방과 후 활동 종사자들이 처해있는 열악한 환경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편집자 : 방과후 학교 강사들은 교단에 최약자로 분류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과 후 학교 선생님들은 위탁사업자 형태로 학교와 일정 기간 계약을 맺었지만 대부분 정해진 급여가 아닌 수업 시간과 참여 학생 수에 따라 보수를 받는 직종이고, 특히 코로나19로 수업이 사라진 이후 제대로 급여조차 받지 못한데다 다른 일을 찾아 헤매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들었습니다.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이 마련되면 그들의 처우도 많이 달라지겠지요?

정의원 : 당연합니다. 방과 후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서 당당한 교육노동자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책임자들은 교육이라는 공동체적 시선으로 방과 후 선생님들의 열악한 직종 현실을 잘 살피고 개선 및 보완해 나가는데 저와 같은 의원들의 역할과 몫입니다. 저는 그 역할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편집자 : 앞에서 논의한 것의 연장선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1일 제371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당시 어떠셨습니까?

정 의원 :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의 정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의 기능,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사항,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종사자 권익증진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 등과 함께 마을 돌봄의 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사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편집자 : 의원님! 경기도내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 의원 : 2023년도 경기도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현황 표를 편집자에게 보여주면서, 경기도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현황은 총 63개입니다. 지금까지 관련 법 및 조례가 없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습니다.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지역 내 보편적 교육복지실천, 저출생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봄 서비스의 질은 돌봄 종사자의 고용안정이 관건입니다. 종사자의 적극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것이고, 경기도만의 특성 있는 방과 후 아카데미로 발전될 것입니다.

[아래 표는 정 의원의 책상에 펼쳐있던 경기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현황입니다]

표.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현황(총: 57개소)

연번	시군	운영기관
1	수원시(2)	수원청소년문화센터
2		칠보청소년문화의집
3	성남시(8)	수정청소년수련관(중등)
4		수정청소년수련관(초등)
5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6		은행청소년문화의집
7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8		야탑청소년수련관
9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10		중원청소년수련관
11	용인시(1)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연번	시군	운영기관
12	부천시(6)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13		산울림청소년수련관
14		부천여성청소년센터
15		소사청소년수련관
16		송내청소년센터
17		소사청소년수련관(주말형)
18	안산시(3)	상록청소년수련관
19		단원청소년수련관
20		안산선부청소년문화의집
21	안양시(2)	안양석수청소년문화의집
22		안양만안청소년수련관
23	평택시(1)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24	화성시(3)	화성시동탄청소년문화의집
25		화성시청소년수련관
26		삼괴청소년문화의집
27	시흥시(5)	시흥시청소년수련관
28		정왕어울림청소년문화의집
29		목감청소년문화의집
30		월곶동청소년문화의집
31		배곧1동청소년문화의집
32	김포시(1)	김포통진청소년문화의집
33	광명시(2)	해냄청소년활동센터
34		광명시청소년수련관
35	광주시(2)	광주시청소년수련관
36		퇴촌청소년문화의집
37	군포시(1)	군포시청소년수련관
38	오산시(3)	오산남부청소년문화의집
39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
40		오산꿈빛나래청소년문화의집
41	이천시(4)	이천창전청소년문화의집
42		서희청소년문화센터
43		청미청소년문화의집
44		부발청소년문화의집
45	의왕시(1)	의왕시청소년수련관
46	하남시(2)	하남덕풍청소년문화의집
47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연번	시군	운영기관
48	양평군(3)	옥천군다목적복지회관
49		동부청소년문화의집
50		서부청소년문화의집
51	고양시(3)	성사청소년문화의집
52		토당청소년수련관
53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54	남양주(2)	남양주청소년수련관
55		남양주진접문화의집
56	파주시(1)	문산청소년문화의집
57	구리시(1)	구리시청소년수련관
58	포천시(2)	포천청소년교육문화센터
59		포천청소년문화의집
60	가평군(2)	가평군가평청소년문화의집
61		가평군조종청소년문화의집
62	연천군(2)	연천군청소년수련관
63		연천군청소년문화의집

편집자 : 2023년 4월 21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평생학습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 경기도 평생학습 마을 발전방안 정담회를 개최하셨잖습니까? 현재 경기도 평생학습 마을 현황이 어떻습니까?

정 의원 : 경기도 내 현재 27개 시군에서 103개 평생학습 마을, 28개 시군에서 729개 평생학습 동아리가 지원대상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한 마을별 공동체의 소통과 활성화가 매우 시급합니다", 지금까지의 마을공동체에서 '평생학습'은 사실상 사각지대였는데 주민자치협의회에 평생학습 분과를 넣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편집자 : 지난 8월 24일 '초고령사회, 평생교육을 철학하다'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가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좌장을 보셨잖습니까? 가장 인상적인 발표 또는 토론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정 의원 : 예! 발표자로 나선 대진대학교 송성숙 교수님의 발표주제였습니다. 발표내용이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민에게 더 많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고른 평생학습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전문인력배치를 위한 법적 시스템 구축을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회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도 매우 동의하였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검토 중입니다.

편집자 : 긴 시간 함께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갑니다. 정윤경 의원님이 바로 공공성 강화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로 뛰는 경기도민의 대변인'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말과 행동〕

〔공공성의 말〕

◆ 회의와 공공성에 대한 고찰 / 서운석*

최고의 조직 교육은 따로 시간을 들여서 진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좋은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처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각종 회의입니다. 회의를 통해 서로 다른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고, 경력자의 지혜와 새내기 동료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을 A 부서와 B 부서 간의 협업 사항에 대한 TF(Task Force) 회의입니다. A 부서의 일부 업무에 대해서 B 부서가 협조하는 방안에 대한 회의입니다. A 부서에서는 '가' 부장, '나' 과장, '다' 사원, '라' 사원이 참석하고, B 부서에서는 '갑' 부장, '을' 과장, '병' 사원, '정' 사원이 참석합니다.

먼저 '가' 부장이 이 회의의 취지와 진행 방향, 오늘 특히 거론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과 좋은 의견 부탁한다는 인사성 발언을 사뭇 길게 합니다.

---

* 한국공공사회학회 부회장

이에 '갑' 부장이 이어받아 협업 사항에 대한 의의와 이를 어떻게 성과 지표와 연계시킬지에 관한 얘기를 역시 길게 합니다.

다음으로 '나' 과장이 오늘 논의하는 안건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하면서 구체적인 얘기는 사안별 담당자인 '다' 사원과 '라' 사원이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을' 과장이 B 부서에서는 어떤 자세로 협업 사항에 나서야 하는지와 B 부서 '병' 사원, '정' 사원이 어떤 역할을 특히 해 주었으면 한다고 얘기합니다.

A 부서의 '다' 사원과 '라' 사원, B 부서의 '병' 사원과 '정' 사원은 상대적으로 업무에 참여한 지 얼마 안 되어 이런 회의를 통해 업무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있는 회의를 통해 교육도 이루어진다면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부 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는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합니다. 많은 공(公)·사(私) 조직들이 조직 내외에서 강사를 초빙해 직원을 교육합니다. 이런 교육의 대표적인 형태는 강의입니다. 신입 직원에게 조직에 관해 설명한다든가, 기존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는 이런 강의 방식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의 회의로 돌아갑니다. A 부서 '나' 과장이 A 부서에서 협업 사항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설명합니다. 이를 듣고 B 부서 '을' 과장이 궁금한 점을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 A 부서의 '나' 과장이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B 부서 '갑' 부장이 나름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에 대해 A 부서 '가' 부장이 그 방안 제시에 대해 이런저런 장단점을 들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를 이어받아 A 부서 '나' 과장이 A 부서의 사정을 얘기하며 좋은 의견인데 이런 한계가 있다는 등의 말을 합니다. B 부서 '을'

과장이 다른 방안을 제시해 보고, 이에 대해 A 부서 '가' 부장과 '나' 과장이 다시 나름대로 의견을 말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의 흐르고, A 부서 '가' 부장이 "다른 의견 없습니까?"라는 의례적인 질문을 던지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여기서 마무리하자고 합니다. A 부서 '다' 사원과 '라' 사원, 그리고 B 부서 '병' 사원과 '정' 사원은 회의 서두에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했던 부장들의 당부를 떠올립니다.

최고의 교육 방법은 회의라고 들었는데 과연 무엇을 교육받은 것일까요? 단순한 지식이 아닌 통솔력이나 소통처럼 태도의 변화를 교육할 수 있을까요? 과연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무엇일까요?

조직과 관련한 소통과 리더십 부문 전문가들은 회의는 최고의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회의는 모두 진행자보다 참여자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말합니다. 이를 위해 진행자는 충분한 준비를 바탕으로 좋은 질문을 기술적으로 던지는 정도에 그치며, 거의 모든 이야기는 실무자들이 이끌어 가는 모양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상사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담당 직원들이 더 속 시원히 의견을 제시할 때 그 회의는 잘 진행된 것이고, 교육이라는 효과도 비로소 나타난다고 합니다.

메신저로도 알려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회의나 윗사람의 일방적인 지시 사항을 메모하는 회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가 최선의 교육이 되려면 그 회의를 주재(主宰)하는 리더의 진행 방식부터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직의 리더들이 회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참여자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끌어내야 하는

지 궁금해할까요? 회의에서 서로 다른 의견은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어떻게 실행으로 연결할지 알까요?

이런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권력(權力)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베버(Weber)의 고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사회적 관계에서 한 행위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는 확률을 말합니다. 권력은 가정 안 남편과 부인의 친밀한 상호의존에서 국가와 같은 보다 큰 사회 단위의 상호의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적 상호의존적 관계의 한 측면이라고 합니다. 이런 권력의 속성 중의 하나가 바로 관계입니다. 한 개인이나 조직이 다른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관계를 밝히지 않고 권력을 소유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여기에서의 관계는 자신이나 자기 조직이 원하는 바를 다른 사람이나 조직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의의 목적 중 하나는 회의를 통해 변화를 기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부족한 상태에서 앞으로 더 나은 상태로 변화를 원합니다. 변화는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특히 생각이나 태도의 변화란 강제적으로 일어나기 힘듭니다. 일방적인 회의나 교육이 끝나고 나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면 여전히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이나 태도의 변화는 어떤 경우에 일어날까요? 변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변화하고 싶은 만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좋은 회의는 이런 사람들에게 변화의 방향과 도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회의가 최선의 교육이 되려면 그 회의를 주재하는 리더의 진행 방식부터 혁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혁신의 핵심 중의 하나가 권력에 관한 질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직원들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해봤자 돌아오는 건 조직 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말뿐이라면 그저 한숨 푹 쉬고 입을 닫는 것이 합리적일 테니까요. 상사는 이런 고마운 충고를 하급자나 후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칼 융(Carl Gustav Jung)은 사랑의 반대는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리더나 선배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직급이 깡패'라는 익숙한 관성이 아니라 내가 권력일 수도 있다는 불편한 통찰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조직이나 회사가 부모님의 원수가 간다고 해도 한 번쯤은 말릴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명나라 때 나관중이 지은 장편소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에서는 유명한 삼고초려(三顧草廬) 얘기가 나옵니다. 초가집을 세 번 방문한다는 뜻인 삼고초려 끝에 유비(劉備)가 제갈량(諸葛亮)을 만났을 때 제갈량은 서천(西川) 54주의 지도를 펼쳐놓고, "장군이 패업(霸業)을 이루시려면 북쪽은 천시(天時)를 차지한 조조에게, 남쪽은 지리(地利)를 차지한 손권에게 각각 양보하고, 장군은 인화(人和)를 이루어 형주(荊州)와 서천을 취해 정족지세(鼎足之勢)를 이룬다면 뒤에 중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천하삼분(天下三分)의 계책입니다. 제갈량의 이 계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방통(龐統)입니다. 방통은 제갈량과 함께 명성이 높아 봉추(鳳雛)로 불렸습니다. 방통은 서천을 차지하는 세 가지 계책을 유비에게 올립니다. 이른바 촉(蜀) 땅을 탈취하는 세 가지 계책(取蜀三計)입니다. 당시 촉의 주인 유장(劉璋)은 한중(漢中)에 있는 장로(張魯)와 대립하고 있었는데, 이 장로를 막고자 참모인 장송(張松)의 건의를 받아들여 형주에 있던 유비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방통은 유비에게 촉을 집어삼킬 계책을 상·중·하책 세 가지로 제안합니

다. 즉각 군사를 몰아 촉의 심장부인 성도를 습격하자는 것이 상책입니다. 트집을 잡아 백수관(白水關)을 습격하여 그곳을 지키는 장수를 죽인 뒤 부성을 거쳐 성도로 향하자는 것이 중책입니다. 고이 백제성(白帝城)으로 물러가 그곳이나 지키자는 것이 하책입니다. 그 가운데 유비는 중책을 선택하고, 결과적으로 수십 일간 성도를 포위한 끝에 유장의 항복을 받고 입성합니다. 스스로 익주목이 된 유비는 나중에 한중왕(漢中王)이 되었고, 2년 뒤에는 조조의 아들 조비(曹丕)가 위(魏)나라를 세우고 칭제(稱帝)를 하자, 유비도 신하들의 추대로 촉한의 황제로 등극함으로써 본격적인 삼국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회의에서 하급자와 후배들이 말을 안 하는 것은 상급자와 선배들의 권력 때문입니다.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을 권력이라고 합니다. 권력은 권위, 힘, 강압, 영향력 등을 포함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회의에서의 권력은 발언권의 다소에 의해 나타납니다. 누가 가장 말을 많이 하나가 누가 회의의 권력자인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회의는 모든 구성원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과 정보교환을 통하여 최선의 시책을 생각하는 것이므로 의견발표나 상사의 명령,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소집된 것은 회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런 취지를 달성하고 회의가 최고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회의에서의 상사들의 자세를 상·중·하책 세 가지로 제안합니다. 상책은 최고의 의견을 자세히 제시하는 것입니다. 중책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입니다. 하책은 의미 없는 의견을 하염없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상책이 말 그대로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상사나 선배가 조직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구성원들이 행동하는 데 있어 방향을 제시하는

말을 한다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하는 목적에는 어떤 도움도 안 되는 말을 권위만 가지고 주야장천(晝夜長川) 해대는 것은 하책일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중책이 존경받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회의는 한 개인이나 소수가 아닌 회의 참여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의 모임입니다. 공공성(公共性)은 조직 공통의 관심사를 관리할 때 통합의 상징으로 설명됩니다. 즉, 조직 전체의 필요성과 전체의 이익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성에는 한 개인이나 소수의 독점이 아닌 전반(全般)의 개념이 수반되며, 또 그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고 효과적이라고 평가될 때 비로소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회의는 공공성이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공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회의가 권력의 반사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은 이를 이해하고 회의가 본래의 의미대로 이행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먼저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영국 속담에 '침묵은 어리석은 자의 최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회의 주재자에 대해 이 영국 속담을 그리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빈번하게 하는 회의를 통해서도 공공성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 안민석이 제안하는 공공성 강화의 목소리 (1)〕

정부, 교육부 이공계 R&D 예산도 대폭 삭감…보호연구 어쩌나

이공학 학술연구기반 구축 사업 1,365억(25.8%) 삭감 등 교육부는
이공계 R&D 사업 모두 '우수' 자체평가
안민석 "정부 이공계 지원 약속은 거짓말"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소관 R&D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오산시, 교육위원회)이 공개한 '2024년 교육부 R&D 예산'에 따르면 이공계 연구 지원을 위한 예산이 총 1433억(26%) 삭감돼 큰 폭으로 줄었다.

정부는 지난 1월 2023년 인문사회·이공분야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이공계 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 △대학연구기반 구축 △학문균형발전 지원의 강화를 계획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 이공학 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 중 박사과정생 등 신진연구자들에게 연수기회 등을 지원하는 '학문후속세대 지원'과 대학부설연구소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연구기반 구축' 예산은 소폭 상승(각각 22억, 4% / 257억, 14%)했으나, 비전임 연구자의 연구나 민간부문 투자가 어려운 보호연구, 지방대학의 연구를 지원하는 '학문균형발전 지원'예산은 사업 예산의 절반이 넘는 1642억(56%)이 삭감됐다.

교육부가 과기부와 별개로 이공분야 풀뿌리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개인기초연구 사업' 예산은 올해 93.2억에서 내년 23.9억으로 74.3% 줄었다. 현행 100개 과제 중 20개 과제가 예정대로 종료된 여파이나, 계속돼야 할 과제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 이공계 R&D 사업인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과 개인기초연구 사업은 각각 2023년, 2022년 진행된 교육부 자체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교육부는 2023년 작성된 자체평가

보고서에서 '학문균형발전 지원'과 관련해 "보호분야 인력양성을 강화하였으며, 학위배출 실적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여 제도 개선의 효과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자체평가 우수 등급을 받은 이공계 R&D 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해 "올해 과기부가 확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투자전략에서도 교육부 이공계 R&D 삭감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정부는 4차산업을 선도하겠다며 이공계 지원을 약속했지만 말 뿐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이공계 연구를 홀대하는 정부에게서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원 안민석이 제안하는 공공성 강화의 목소리 (2)〕

안민석, 대학 천원의 아침밥 지역격차 대책 필요/ 안민석

"천원의 아침밥, 전국 10개 시도 총 18.9억 지원
정부지원 확대로 지역격차 해소해야"

2017년 시작한 '대학 천원의 아침밥'이 올해 대거 확대된 가운데 정부 지원 확대로 대학 재정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이 1,000원 부담하고 농식품부가 1,000원, 그리고 학교가 나머지를 부담해 3~5,000원 상당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쌀 소비, 학생 건강, 식비 경감 효과 등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올해 41개 대학, 연 69만 명분, 7.8억 원 지원을 당초 계획했으나 지금은 145개 대학, 연 234만 명분, 2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하지만 최근 인건비, 식자재 등의 물가 인상으로 인해 대학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학들은 정부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다행히 지자체들이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재정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역 사정에 따른 차등 지원은 급식 질의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작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 천원의 아침밥'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에 조사한 '2023년 전국 지자체 천원의아침밥 예산 지원 현황'에 따르면 10개 지자체에서 총

18.9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끼에 1,000원씩 지원한 광역지자체는 서울(28개 대학, 5.1억), 전북(10개 대학, 3.9억), 전남(6개 대학, 3.6억), 대전(10개 대학, 1.2억), 인천(7개 대학, 0.9억), 경남(6개 대학, 0.8억), 광주(4개 대학, 0.5억), 대구(4개 대학, 0.3억) 등이며, 한 끼에 2,000원씩 지원한 곳은 제주(3개 대학, 1.5억), 충남(9개 대학, 1.1억) 등이다. 경기도는 24개 대학에 1끼당 1천 원씩, 총 0.9억을 올해 추후 추경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안민석 의원은 "고물가시대 인건비와 식자재비가 증가하여 대학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대학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공부하는 학생에게 건강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원 확대 요구와 함께 급식의 질 관리와 종사자 근무 여건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표. 2023년 상반기 전국 광역지자체 천원아침밥 예산 지원 현황

광역지자체명	지원 대학 수	한끼당 지원액(원)	지원 총액(원)
강원	지원 없음		
경기	지원 없음		
경남	6개	1,000	0.8억
경북	지원 없음		
광주	4개	1,000	0.5억
대구	4개	1,000	0.3억
대전	10개	1,000	1,2억
부산	지원 없음		
서울	28개	1,000	5.1억
세종	지원 없음		
울산	지원 없음		
인천	7개	1,000	0.9억
전남	6개	1,000	3.6억 (시군비 포함)
전북	10개	1,000	3.9억 (시군비 포함)
제주	3개	2,000	1.5억
충남	9개	2,000	1.1억
충북	지원 없음		
계	87개	-	18.9억

〔국회의원 안민석이 제안하는 공공성 강화의 목소리 (3)〕

안민석의 아이디어와 제안으로 정착시킨 오산 교육 3대 성공사업!

"교육부 장관 초청 전국 롤모델 통기타 수영 교육, 학교복합시설 참관
이주호 장관, 오산 교육 성공모델 전국 확산 약속"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의 제안으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월 14일 경기 오산시 원동초를 찾아 유아 생존 수영, 통기타 교육과 학교복합시설을 참관했다.

안민석 의원이 국정감사와 상임위 회의에서 문예체 교육을 강조하면서 오산 교육의 성공모델을 설명하며 오산 방문을 제안한 것이 성사된 것이다.

전국 롤모델인 오산의 통기타·수영 교육, 학교복합시설은 안민석 의원의 아이디어와 제안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킨 '안민석표 오산 교육 3대 성공사업'이다.

오산의 수영 교육은 2012년 초등 수영 교육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 초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 2015년 중학교 1학년으로 확대하고 2016년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만 5세 유아까지 확대하면서 대한민국 수영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수영은 100세 시대 다른 운동과 달리 한 번 배우면 평생하는 운동으로 학생의 안전은 물론 신체적·정서적 건강, 인성교육, 사회성 함양에 효과적인 운동이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오산의 유치원생들은

자유형, 배영처럼 일반적인 영법을 주입하는 교육방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물속에서 적응하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기 주도형 무지개 수영법을 배우고 있다"며 “이동식 수영장도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의 협력과 지원이 있으면 모든 아이들이 수영을 배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산의 통기타 교육은 2015년부터 시행 중이며 초등 5학년·6학년 학생들이 방과후 수업이 아닌 정규 교과수업 시간을 활용해 배우고 있다. 통기타는 다른 악기에 비해 구입하기 쉽고 관리도 편하며 휴대성이 좋아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다. 특히 악기 교육의 큰 애로사항인 전문강사는 지역사회 기타 동호인들의 재능기부가 가능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혼자서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오산 원동초 학교복합시설은 수영장 시설을 갖춘 시민개방형 시설로 2017년 개관하여 오산시설공단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과 주민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다.

안민석 의원은 "문예체 교육 학생 1운동 1악기는 학생이 성장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교육"이라며 "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는 사교육 없이도 누구나 배우도록 시설, 강사, 프로그램을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산 교육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방문해 주신 교육부 장관님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주호 장관도 "오산에서 시작한 초등학생 생존수영이 전국으로 확산

된 것처럼 유아 생존수영, 통기타 교육, 학교복합시설도 전국에 널리 확산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주의 학교 상임대표 송주명〕

지식교육프로그램의 시장, 에듀테크 진흥방안에 대한 송주명 교수*의 견해?

"에듀테크 진흥방안은 공교육을 디지털 교육기업 (에듀테크기업)들의 '지식교육프로그램'의 시장이자 실험장, 데이터공급처로 적극 공급 하겠다는 것이 핵심 골자"

교육부가 "에듀테크 진흥안"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내용을 조금 더 들여보면 공교육을 디지털 교육기업(에듀테크 기업)들의 '지식교육 프로그램'의 시장이자, 실험장, 데이터 공급처로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골자이다.

---

* 민주주의 학교 상임대표/ 한신대 교수.

그 첫걸음이 디지털교과서 사업이다. 또 전문교사를 육성해 교육현장에서 에듀테크의 전도사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민간 기업의 프로그램을 구입 할 수 있도록 공적 바우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들은 공공적 교사라기보다는 교육 현장에서 민간 에듀테크 기업들을 대변하는 상업적 행위자로 전락 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스스로가 '에듀테크 산업부'라는 정체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느낌이다. 아이들이 스스로의 생각을 키워내는 자양분인 '지식교육'을 통으로 민간 에듀테크 기업들에게 '민영화'하겠다는 교육부의 반교육적 처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 에듀테크 진흥방안과 교육부의 향후 계획에 대한 언론보도를 살펴보자!

에듀테크 진흥방안이란

에듀테크 진흥방안은 교육현장에 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 학생이 인공지능(AI),빅데이터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에듀테크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학생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결국, '에듀테크'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제품과 서비스를 이르는 표현이다.

에듀테크 진흥, 디지털시대 학생 맞춤형 교육의 실현=에듀테크 진흥방안은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교육에 활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개별 교육으로 학생 개개인 역량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에듀테크 산업을 글로벌 전략산업으로 발전하는 방안까지 포함한다.

에듀테크 진흥방안에 대한 교육부의 향후계획

<이코노 뉴스> 2023년 9월 18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모든 교사가 에듀테크를 수업에서 쓸 수 있도록 소양 교육을 확대하고 무료 체험 플랫폼을 구축한다.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K-에듀테크'를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1년 7조3000억원 규모인 에듀테크 산업 시장이 연 평균 8.5%씩 성장해 2026년 1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학교에서는 수업에 적합한 에듀테크를 찾아서 사고 쓰기까지 모든 과정을 교사 개인이 직접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지적돼 왔다.

교사 연령이 높아질수록 에듀테크를 쓰는 사람도 줄어드는 경향이다. 20대 교사는 68.2%, 30대는 71.8%가 에듀테크를 활용하지만, 50대는 54.9%로 하락한다. 정부는 모든 학교 구성원이 에듀테크를 잘 익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사가 에듀테크를 사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지급하고 조달 체계를 만든다.

교육부는 기존 학교 조달시스템(학교장터)를 내년 '에듀테크 전용몰(Mall)'로 확대한다. 또 10억원을 들여 교사들이 다양한 에듀테크를 무료로 체험하고 평가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에듀테크 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교육부 에듀테크 선도고교 시범사업 모델〉

주) 에듀테크 선도고교는 학교 구성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내 지능형 교육환경 구축, 교수·학습 혁신 및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등을 실현한다. 전자신문(2020.10.26.)

〈교육기술(Edu-tech)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선정 학교〉

에듀테크 선도학교	온라인 공동교육거점센터(거점학교)
호산고(대구), 빛고을고(광주), 이문고(대전), 성신고(울산), 시온고(경기), 청원고(충북), 온양한올고(충남), 전주고(전북), 매성고(전남), 형곡고(경북)	대구고(대구), 선인고(인천), 서강고(광주), 약사고(울산), 광휘고(경기), 향일고(경기), 충주예성여고(충북), 서천여고(충남), 덕산고(충남), 목포고(전남), 포항동성고(경북), 제주중앙여고(제주)

〔현장의 외침〕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논평/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교육부는 1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2028 대학입시 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였다.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국어와 수학, 탐구영역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모든 수험생이 공통과목에 응시, 고교 내신은 평가체계가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뀐다고 밝혔다. 수능과 내신 모두 개편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의견 수렴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하 학사모, 상임대표 최미숙)은 가능하면 대학입시안이 많이 바뀌지 않으면서 공정한 수능, 예측 가능한 대입,

혼란 없는, 안정적인 대입 개편안을 기다렸다. 다행히 2028 대학입시 제도 개편 시안은 학생들의 불만이 많았던 선택과목 유불리에 대한 우려 점 해소와 내신에 대해서도 학교의 내신 부풀리기 방지와 학생들이 수업에 현재보다 집중, 대학입시 혼란을 최소화 하는 내신 성취평가제가 되었다고 본다.

다만, 기존 20여년간 논란이 되고 있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정책, 객관식 평가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언제까지 유지 할 것인지, 서논술형 말은 하면서도 이 역시도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부분은 아쉽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고교학점제로 대표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발표 이후, 매번 입시문제로 학생과 학부모는 혼란을 겪었기에 대입제도가 어떻게 변할까 개편방향에 관심을 집중 해오고 있었다. 학생과 학부모는 계속 바뀌는 대입제도와 검정고시 및 N수생 증가, 의대쏠림, 문. 이과 유. 불리, 수능킬러문항, 수능카르텔, 문과침공 등 문제점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현재 입시는 수능과 학생부 종합전형이 크게 대표되고 있는데, 특히 수능에서 학생들의 진로. 적성에 맞는 국어와 수학의 선택과목의 유불리는 그동안 학생들에게 엄청 불만이 많았다. 쉽게 생각해도 학생들이 100점 만점을 맞았다고 하면 엄청난 노력을 통해 수능과목에서 만점을 받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만점을 맞아도 국어와 수학의 선택과목에 따라서 한 학생은 표준점수가 100점이고 다른 학생은 120점 받는 불공정 현상으로 우리 아이들이 대학 입시에서 합격과 불합격 된다면 너무 불공정하지 않은가.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 선택과목의 유불리 우려 해소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내신은 현재 상태로 라면 1학년만 9등급이고 2, 3학년은 성취도 기반한 절대 평가라면 학생들은 학원으로, 또는 1학년 때 내신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은 지역으로 이사 가거나 성적이 안 나오면 오히려 자퇴하는 학생들이 늘어나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갈 가능성이 높다. 예전과 같이 학교교실의 내신 부풀리기 현상 문제점 예상도 만만치 않다. 이런 점에서 내신 5등급 체제의 긍정적 측면과 함께 내신 성적만으로도 지방에서나 서울의 여건이 열악한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주요대학에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다.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과 사교육업체가 유착하는 '카르텔'을 막기 위해 출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과세정보를 확인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사모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사익추구 교사의 사교육카르텔에 개탄을 표하며 행태가 근절되고 완전히 끊어내기를 촉구한 바 있다. 사리사욕을 위해 학원에 문제를 파는 행위는 교사의 본분을 망각한 부적격 교사라고 할 것이며, 학생, 학부모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권추락 증가의 한 요인이 될 것이다. 문제의 현직 부적격 교사들은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킬러문항을 만들었으며 학원에 교육과정의 척도, 기준점을 제공했다. 정부는 학원과 고교교사와의 카르텔, 사교육과 대학교수와의 연결고리도 확실히 근절시켜야 한다.

대입제도는 공교육이 정상화되어 살아나는 희망이 있는 교실이 되어야하고 예측가능한 지속적인 정책으로서 신뢰가 있어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지난 20여년 간 상대평가, 절대평가 논쟁의 범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교육의 현실이다. 하지만 향후 대학입시안은 미래를 향한 시도가 있어야 한다.

이에 학사모는 앞으로의 대입제도가 미래 지향적으로 수능, 내신 등 대입 제도가 제대로 방향을 세우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교육의 백년대계에 일조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마을 공동체를 찾아서〕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가 탄소중립 실천에 맨 앞에 서다/이은수

1. 음식물류폐기물 절감방안 자원순환 세미나 개최하다

환경부(환경보전협회) 지원사업인 음식문화개선 홍보.교육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방안 및 인식개선 문제와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전문가를 초청해 들었고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감량 실천 활동을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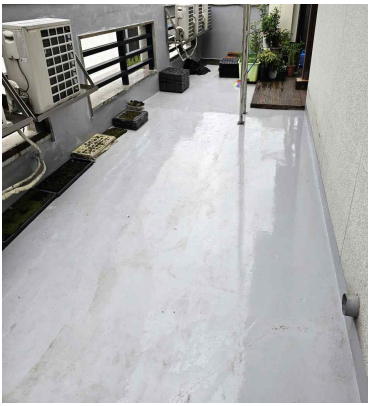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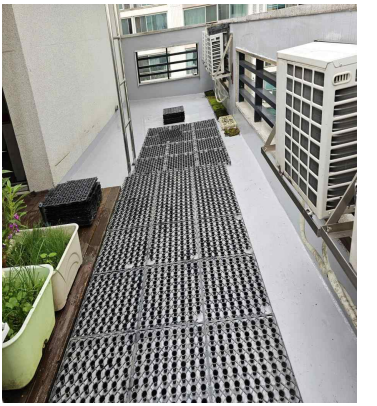
습관을 넘어 문화를 바꾸는 일은 쉽진 않지만 우리가 꼭 이뤄야 할 과제다. 나부터 하나씩 바꾸다 보면 언젠가는 사회 전체가 바뀌는 문화로 발전될 것이다.

음식문화개선 자원순환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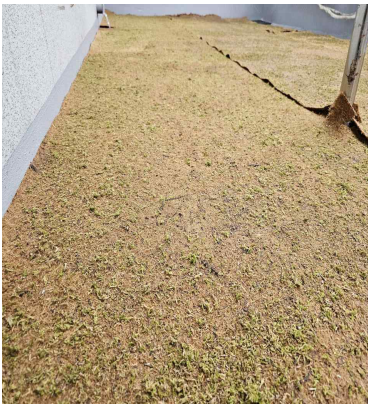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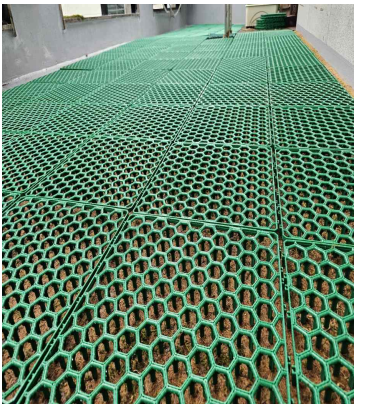
2. 노원에코센터에 이끼 재배 모델을 만들다

사례1) 옥상에 이끼 심고 가꾸는 모델

방치된 옥상에 하중이나 누수 걱정 없이 가벼운 배수판과 야자 매트에 이끼 씨앗을 뿌리고 이끼가 자랄 수 있는 약간의 공간확보(약3cm 정도)만 해주고 주기적인 관수 하면 3cm 정도 공간 안에서 이끼를 키울 수 있고, 이끼가 탄소흡수에 적합한 식물이고, 건물온도도 낮춰주고 도심 열섬 현상도 완화시켜 주는 좋은 모델이다.

옥상의 맨 바닥에 배수판을 깐다

배수판 위에 야자매트를 깔고 이끼씨앗을 뿌리고 잔디 보호판(3cm공간 확보)을 깐다

보호판 위에 차광막을 덮고 스프링클러(자동관수)를 설치, 1일 1~2회 2분씩 관수

사례2) 유휴공간을 활용해 이끼 가꾸는 모델

2번째 모델은 콘크리트에 방치된 공간을 활용한 모델이다.

주차장 옆 오수관 배관이 지나는 곳인데 이곳에 이끼가 클 수 있도록 만들었다.

차광막과 설명판을 넣어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만들었다.

콘크리트 빈 공간 활용해 이끼 키우는 모델

사례3) 빗물을 받아 이끼를 키우는 모델

3번째 모델은 우수관에서 버려지는 빗물을 빗물 화분에 모아 저면관수로 이끼를 키우는 모습이다. 우수관로가 있는 건물 뒤편은 그늘지고 방치되 있는게 일반적인데 이런 곳에 이끼가 잘 자란다. 빗물 화분을 깔고 심

지를 꽂고 부직포를 덮고 이끼 씨앗을 뿌리고 이끼가 자랄 수 있도록 약간의 공간을 확보해 준다. 빗물 화분에 물이 없어지면 적당히 관수해 주고 기다리면 예쁜 이끼들이 잘 자랄 것이다.

최소한의 관리만 해주고 1년 정도 기다려준다면 멋진 작은 밀림이 탄생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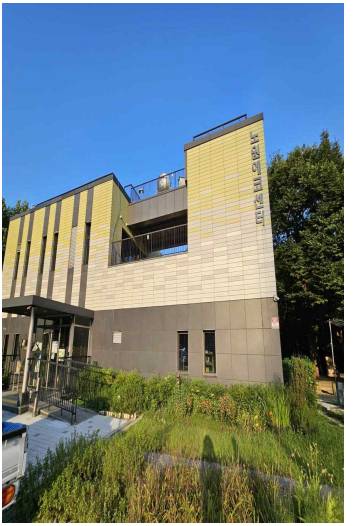
빗물받아 이끼 키우는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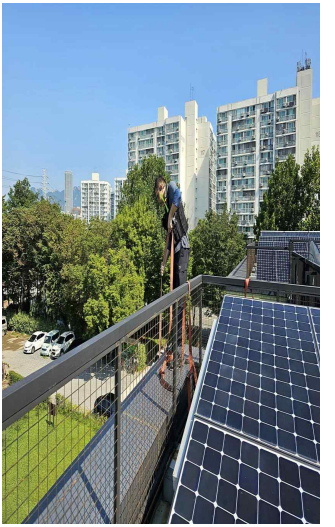
사례4) 태양광 판넬 밑 그늘에서 이끼 키우는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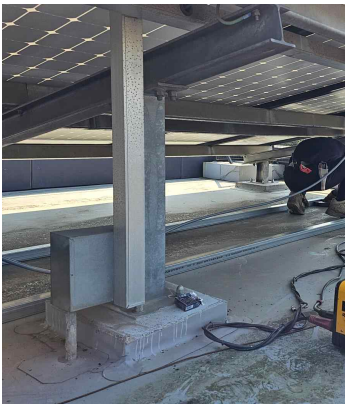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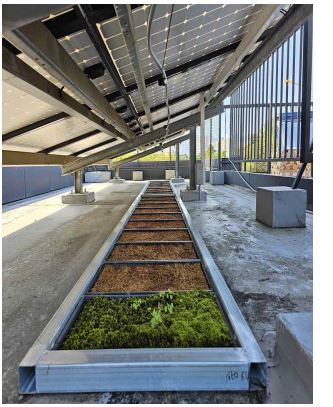
태양광 판넬에선 전기를 생산하고 그 아래 그늘에선 이끼를 키워 탄소 흡수원 늘리면 어떨까? 도심속 유휴공간을 찾아 식물을 심어 공기 중 탄소를 줄일 수 있다면 기후위기를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을 텐데~~

생각하면 우리는 바로 실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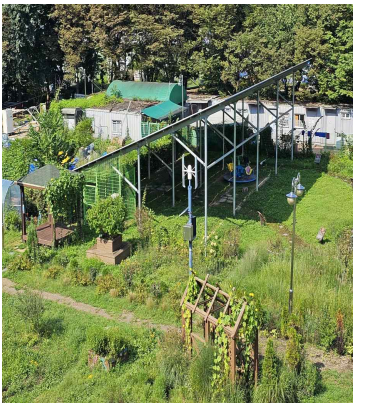
노도네 메이커들과 태양광 판넬 밑에 이끼가 클 수 있도록 야자 메트에 이끼 씨앗 뿌리고 자동관수로 1일 2회 관수해 습도 유지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면 예쁜 이끼들이 자랄거고 내가 배출한 탄소를 이끼가 흡수시키면 나부터 탄소중립 실현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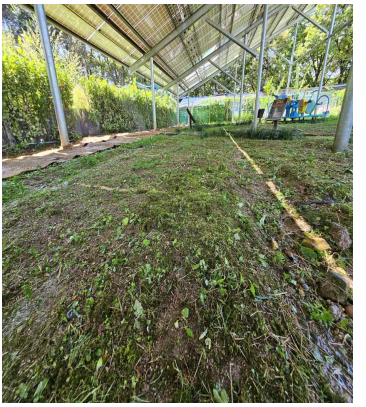




노원에코센터 옥상 태양광 판넬 밑에서 키우는 이끼재배 시설





노원에코센터 대형 태양광판넬 아래에 이끼재배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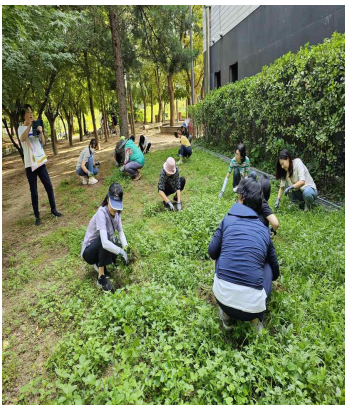
사례5) 노원에코센터 건물 후면에 이끼 키우는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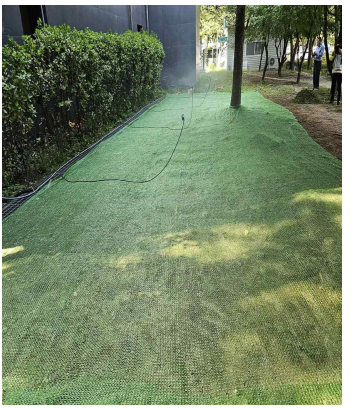
햇빛 잘 드는 건물 앞쪽엔 나무나 꽃을 심고 그늘 진 곳엔 이끼를 키우면 어떨까?

이끼는 적당한 그늘이 필요하니 건물로 만들어진 그늘을 이용하면 쉽게 이끼를 키울 수 있고 그만큼 탄소 흡수원을 늘릴 수 있으니 작은 비용으로 탄소 흡수원을 늘리는 일이 된다

그래서 탄소중립 실천 워크숍을 통해 탄소 흡수원 늘리는 실습으로 그늘 진 곳에 풀을 뽑고 이끼 씨앗을 뿌리고 차광막을 덮고 자동관수로 1일 2회 물을 뿌리는 시설을 했다,

풀 사이 이끼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내년쯤엔 이끼 숲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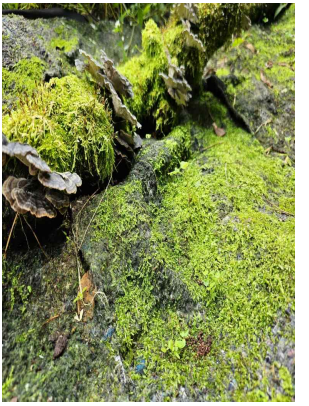


노원에코센터 건물 뒤쪽 이끼재배 모델

사례6) 천수텃밭 배나무에 있는 이끼를 부직포에 털어 키운 이끼 모델

올해 1월 부직포를 배나무에 달린 이끼를 털어서 숲속에 두었더니 예쁜 이끼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이다

이끼는 나무나 돌에서도 자라는 모습을 보고 부직포 천에서도 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직접 해보니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도심속에서도 이끼를 키우는데 문제 없다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탄소 줄이는 방법은 흡수원을 많이 늘리는 일이고 이끼가 대안임을 확신한다.



올해 1월 부직포로 배나무에 달린 이끼를 털어 키운 이끼 매트 모습

4. 공릉동 신원아파트 파이프 팜에 꽃 심다

마을 가꾸는 일은 쉽진 않지만 7년째 공릉동 신원아파트 담장에 설치된 파이프 팜에 꽃 심고 주민들과 잘 가꾸고 있습니다. 5월과 9월에 주민들과 꽃 심으면서 인사 나누고 꽃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 하는 이웃들이 있어 행복하다.

〔공공성의 역사를 찾아서〕

《월간 공공성》 창간호가 선정한 "공공성 강화 1호 대동법", 잠곡潛谷김육 선생을 만나다/김상돈*

"이 법(대동법)의 시행을 부호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영(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소민(小民)들의 바람을 따라야 합니다.

어찌 부호들을 꺼려서 백성들에게 편리한 법을 시행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김육이 효종에게 대동법의 시행을 건의하는 실록 기사 중)

한국공공사회학회는 2023년 12월 31일 《월간 공공성》 창간호를 발간한다. 이 책의 핵심 주제로서 "공공성의 역사와 마을 등등을 찾아서"의 제

* 고려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한국공공사회학회 대표

호는 필자가 판단하기에 매우 잘 만들어진 소제목이다. 그 이유는 공공성 또는 사회복지 등이 우리나라에도 바람직하고 좋은 선례와 사례가 있음에도 대다수의 학인들은 서양에서 그 선례와 사례, 이론들을 찾아 헤매기 때문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월간 공공성》 창간호에서는 대동법을 완성한 조선 최고의 개혁가 잠곡潛谷 김육 선생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배경이야 나름 편집인들의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 이유가 차치하더라도 김육 선생을 '공공성의 역사를 찾아서 1호'로 다룰 만큼의 역사적 가치와 시사성은 차고 넘친다.

퇴계 이황 선생, 율곡 이이 선생, 다산 정약용선생은 사상가 또는 대학자로 칭한다면, 김육 선생은 개혁정치가이자 경제 관료로 불린다. 조선의 3대 개혁정치가로 정도전, 조광조, 김육을 손꼽는다. 김육 선생(潛谷 金堉, 1580년-1658년)은 대동법의 성공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으로 알고 헌신한 경제 관료이자 정책가다. 김육은 1580년 한성부 서부 마포면 마포리 외가에서 태어났다. 김육의 본가는 경기도 가평군 잠곡으로서 마을 이름을 따 호를 잠곡潛谷이라고 하였다. 본관은 청풍이다.

필자가 일전에 프레시안 칼럼니스트로서 김육 선생을 이렇게 정의하였다. 김육 선생은 경제정책의 핵심을 소수의 부유 계층이 아닌 다수의 가난하고 곤궁한 백성들에게 두어야 한다는 **조선 최초의 '조세 정의를 주창한 분배론자'였다.** 국가보다는 백성의 삶이 더 우선시해야 한다는 先분배 後성장의 시작인 셈이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이롭다"라는 안민부국론(安民富國論)이다. 김육의 안민부국론 사상은 조선 후기 북학 실학자들에

의해 고스란히 계승되었다.

김육 선생은 경기도 가평 잠곡의 청덕동에 들어가 은거하며 산 적이 있었다. 김육이 1605년(선조 38년) 사마시에 합격해 성균관으로 들어갔다. 성균관 유생 시절이었던 1609년(광해군 1년)에 "'책을 뚫고 현실로 나아가라' 주창했던 남명南冥 조식의 최고 제자" 내암來庵 정인홍이 올린 '회퇴변척소(晦退辨斥疏)'(*광해군 대에 오현종사와 관련하여 회재晦齋 이언적과 退溪 이황이 아닌 성운과 조식이 문묘에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상소*) 사건에 관해 상소를 올렸다. 김육은 굳이 책임지지 않아도 됨에도 스스로의 결단에 따라 성균관을 떠나 경기도 가평 잠곡의 청덕동으로 들어가 은거하며 10년 동안 살았다. 당시 김육의 나이는 34세였다. 김육은 기거할 집이 없어 굴을 파고 서까래에 얽어맨 움막에서 낮에는 직접 농사지으며 숯을 구워 장사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저녁에는 송진 불을 켜고 책을 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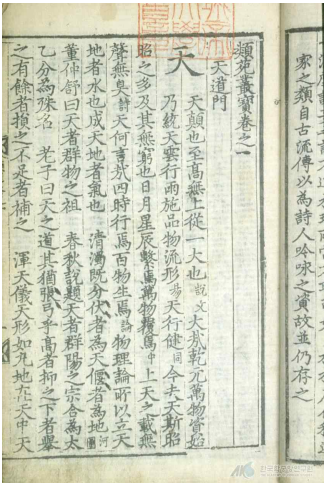
김육 선생은 잠곡 청덕동에서 10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으며 백성들의 형편과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을 체험한 뒤 나라를 위해 일할 기회가 주어졌다. 당시 그의 나이는 44세였다. 44세(1623년, 인조 1년)부터 그가 생을 마감하는 향년 79세(1658년, 효종 9년)까지, 그는 대동법확대 시행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개혁정치가이자 경제정책가다. 그의 신념은 참으로 백성을 위하는 길이란 고상한 명분이나 이론에 집착하는 대신 세제의 공평을 실현함으로써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으로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김육 선생이 지향하는 삶의 실천철학이었다.

김육 선생은 실질을 내세워 성리학 이상론자들에게 맞서고 백성이 편리하게 여긴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기득권자들의 저항에 당당하게 맞서면서 부드럽게 제압해 갔다. 동시에 대동법 제도 시행에 필요한 실무를 꼼꼼히 챙기면서 관계자들을 독려해 나갔다. 김육 선생은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도 대동법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왕에게 개진하였다. 김육의 마지막 상소에서 등장하는 육곡 서필원은 1658년 전라감사에 임명됐다. 호서대동법이 긍정적 성과를 거두었고, 김육의 강력한 천거로 전라도의 대동법 시행을 위한 조치였다. 전라감사로 부임한 서필원은 대동법의 시행과 함께 백성 구휼을 위해 노력했다. 1659년 전국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자신의 봉록을 내어 백성을 구휼하고, 소 전염병으로 경작이 어려울 때는 다른 지방에서 소를 얻어 나눠주기도 했다. 육곡 서필원은 김육과 함께 민본과 변통을 중시하는 실천적인 경세가"라고 평가된다.

죽음을 앞둔 마지막 상소

소신의 병이 몹시 깊어서 실날같은 목숨을 얼마나 이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중략) 올해 농사가 흉년이라서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대동법을---소신은 서필원을 전라도 감사로 추천하여 그일을 성사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신이 이제 죽고 말면, 아무도 돕는 이가 없어서 중도에 폐지될 염려가 큽니다. 서필원이 호남에 내려갈 때 전하께서 대동법의 시행에 힘쓰라고 간곡히 당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신이 바라는 대로 대동법을 꼭 시행하게 하소서.(실록, 효종 9년 9월5일 참조)

필자는 잠곡潛谷 김육 선생을 ‘폭넓고 깊게’ 사유하고 만나기 위해 그가 엮은 『유원총보역주』를 야심차게 읽어보려 했다. 《유원총보(類苑叢寶)》는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유서라는 역사적 의의뿐만 아니라,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도 대표성을 지니고 있어서 오늘날 국학 연구자들에게도 필요한 공구서(工具書)다. 우선 동일한 주제어 아래에 다양한 층차의 유사어 및 관련어의 실례를 모아 엮었기 때문에, 한자(漢字)로 된 텍스트를 해설할 때 수시로 부딪히게 되는 의미 변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더 정확하고 심도 있는 번역을 가능하게 한다. 이 책은 그 자체로 문화학(文化學) 텍스트로서, 국학 관련 연구자들에게 한문(漢文)에 대한 소양을 심화시킬 수 있는 텍스트로 활용될 수 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자료총서의 하나인 《유원총보역주》는 총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類苑叢寶卷之一
天道門
天
天顛也至高無上從一大也說文大哉乾元萬物資始
乃統天雲行雨施品物流形易天行健同今夫天斯昭
昭之多及其無窮也日月星辰繫焉萬物覆焉中上天之載無
聲無臭詩天何言哉四時行焉百物生焉論物理論所以立天
地者水也成天地者氣也 清濁既分伏者為天偃者為地河圖
董仲舒曰天者群物之祖 春秋說題天者群陽之宗合為太
乙分為殊名 老子曰天之道其猶張弓乎高者抑之下者舉
之有餘者損之不足者補之 渾天儀天形如丸地在天中天

권1～3에 천도문(天道門), 권4에 천시문(天時門), 권5～7에 지도문(地道門), 권8～10에 제왕문(帝王門), 권11～18에 관직문(官職門), 권19에 이부(吏部), 권20에 호부(戶部), 권21·22에 예부(禮部), 권23에 병부(兵部), 권24에 형부(刑部), 권25～27에 인륜문(人倫門), 권28에 인도문(人道門), 권29～32에 인사문(人事門), 권33·34에 문학문(文學門)·필묵문(筆墨門)·새인문(璽印門), 권35에 진보문(珍寶門)·포백문(布帛門), 권36은 기용문(器用門), 권37에 음식문(飮食門), 권38에 관복문(冠服門)·미곡문(米穀門), 권39·40에 초목문(草木門), 권41～44에 조수문(鳥獸門), 권45·46에 충어문(虫魚門), 권47에 부록 등이 수록되어 있다.

『유원총보역주』는 완독을 못했지만,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0호 '대동법시행기념비'를 만나기 위해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140-1번지로 향했다. 이 비는 효종 10년(1659) 김육이 죽은 뒤 충청도 백성들이 호서(충청도)에 실시한 대동법에 감사하여 그 은공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다. 비의 본래 이름은 김육대동균역만세불망비(金堉大同均役萬世不忘碑)이며, 비문은 홍문관부제학 이민구(李敏求)가 짓고 의정부 우참찬 오준(吳竣)이 썼다. 본래 위치는 현재보다 마을 쪽으로 1백여 미터 아래 옛 소사원 터에 있었지만 1970년 현재 위치로 옮겼다. 높이는 300cm, 너비 85cm, 두께 24cm이다. '대동법시행기념비'는 대동법을 시행해서 세금을 고르게 해준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뜻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조문한 예가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이이요, 또 한 사람은 김육이다.

대동법은 기존 공납제를 쌀로 환산하여 대동미(大同米)라는 명칭 아래 밭(田) 1결에 대하여 미(米) 12말(斗) 씩 징수하게 되었는데 이를 포(大同布)나 돈(大同錢)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세금 제도다. 대동법은 가호(家戶)마다 부과했던 공납을 토지 면적에 따라 부과함으로써 일반 농민들의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양반지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조세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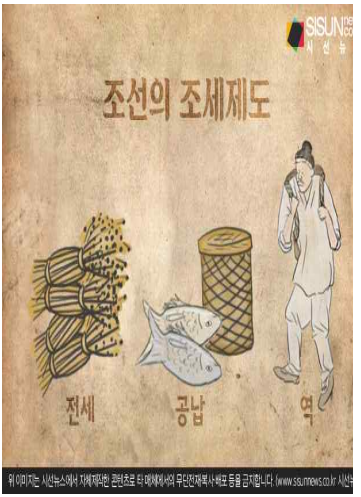
대동법에서 대동(사람 사이의 큰 평등 : 크게 다르지 않다)은 유가(儒家) 경전의 하나인 예기(禮記)에 그 뜻이 설명되어 있다. 예기에선 대동을 '경쟁과 쟁탈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익도 공평하게 나누는 공(公)의 상태'라고 했다. 공자는 선양(자식이 아닌 현명하고 능력이 있는 자에게 물려줌)을 하면 예를 교육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예를 갖추게 되고 재화를 공유화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이것이 억강부약 대동 세상의 유래다. 억강부약(抑强扶弱)의 대동 세상(大同世上)에서 억강부약이란 횡포한 강자를 제어하고 선량한 약자를 북돋아 줌을 뜻하는 것으로서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도출된 어깨동무를 의미한다.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데 걸린 데 시간은 대략 10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1608년(광해군 즉위년) 오리梧里 이원익(1647-1634)* 의 건의로 먼저 경기도에서 시행되었고, 인조원년(1623년) 강원도에서 실시하고 1708년(숙종34) 전국적으로 실시되기까지 100년에 걸친 대장정이었다. 백년 시간이 걸린 이유는 당시 모든 왕과 백성들은 원했으나 신하와 유림, 토착비리 세력인 호세가와 탐관오리, 그리고 방납업자 간에 형성된 부패세력 등 기득권 세력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대동법의 원인이 되는 공납제의 문제점은 이미 16세기부터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조선의 조세제도는 토지에 부과되는 전세(田稅)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 집집마다 부과되는 공납으로 이뤄져 있었다. 그중에서도 공물은 경제력에 상관없이 일관되기 부과했기에 농민들을 힘들게 했다. 할당된 공물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대신 납부하고 폭리를 취하는 방납이 성행하는 등 중간 수탈이 심각했다.

---

* 대동법 개혁책의 물꼬를 튼 오리梧里 이원익(1647-1634)선생은 대동법의 시초라 할 경기도 선혜법을 일회적인 조치로 생각한 광해군을 설득하여 항구적인 제도로 전환시켰다. 반정 정권의 인조는 이원익을 영의정으로 내세워 백성의 마음을 얻은 후, 이원익이 제청한 민생 문제 해결을 국정 운영 기본 방안으로 안민(安民)정책을 채택했고, 연장선에서 공물을 줄이는 삼도대동법(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추진을 시작했다. 정치적 쿠테타 인조반정 이후 인조의 부름을 받고 이원익 선생이 한양에 도착하자 백성들이 오리(梧里) 대감이 오셨다고 기뻐할 정도로 경륜과 인품이 겸비된 재상이었다. 이원익은 선조 때 황해도, 평안도 지역의 지방 수령으로 백성을 사랑한 애민(愛民)정신의 안민(安民)행정으로 많은 치적을 쌓아 백성들이 흠모(欽慕)한 유능한 관리였다. 오리 이원익 선생에 대한 논의는 이 정도의 선에서 마무리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원익 선생과 관련한 각종의 문헌과 단행본을 참고하기 바란다.



16-7세기 조선의 백성에게 가장 큰 부담은 공납이었다. 공납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임금에게 바치는 것으로 백성으로서 임금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충성의 개념을 조세로 표현한 것이었다. 그러나 농민의 피땀을 갉아먹는 세법이었다. 예를 들어 바다가 없는 군현에 공납으로 생선을 바치라고 할 경우 농민들은 해안까지 가서 사다가 바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선을 사서 바치기 위해 어촌까지 가야 할 농민의 부담이 어떠했을 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또한 부과되는 시기도 문제였다. 상공, 별공을 위시해 수천 가지에 이르는 공납을 시도 때도 없이 부과했다.(이덕일의<송시열과 그들의 나라>에서 발췌)

16세기부터 17세기 동안 큰 전란만 꼽아도 임진왜란(1592)과 병자호란(1636)이 있었고, 이른바 정치적 쿠데타인 인조반정(1623)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내란(이괄의 난, 1624), 전염병과 극심한 흉년(1643~1644, 사망자 40,200명)으로 인구는 격감했고 토지는 황폐해져 국가재정이 파탄 났고 백성의 삶은 피폐했다. 이 같은 절망적 상황과 우여곡절 끝에서, 대동법이라는 개혁 법안이 오리 이원익의 주장에 의해 경기도에서 실험시행의 시작이었고, 그 마무리는 잠곡 김육에 의해서 완성하게 됐다.

대동법은 각종 토산물 대신 쌀로 통일하여 징수했고, 과세의 기준도 종래의 가호(家戶) 단위에서 토지의 결(結) 수로 바뀌었다. 이는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로의 제도적 전환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가는 보다 넓은 세원(稅源)을 확보할 수 있었고, 백성의 세 부담은 감소 됐다. 이로써

대동법은 조선 최고의 개혁이 되었으며, 백성들은 기존에 내던 세금의 1/5 정도만 낼 수 있게 되었다. 대동법은 국가와 백성 모두를 살리는 혁신적인 개혁법이었다.

토지(田結)에 대한 과세가 소득 또는 재산에 대한 과세인지 여부는 불명확하지만, 매해의 소득 작황과 풍년·흉년 여부에 따라 과세하였다는 점에서, 일단은 소득에 대한 과세에 가까운 것이다. 또한, 그 과세기준인 결(結)의 의미가 단일한 면적 기준이 아니라 일정량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양적 의미에 따라 그 면적이 단계별로 달라지는 점에서 볼 때, 오늘날 누진세적 소득구조의 기초가 되는 일종의 비례세적 개념이 도입되어 수평적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조선 최고의 안민(安民) 개혁책인 대동법은 지역 특산물인 공물(貢物)을 사들여 백성에게 비싸게 받아내 폭리를 취하는 방납비리(防納非理)의 근절책이며, 동시에 공물가의 부과 대상을 고을에서 전결(田結)로 바꿔 부과된 공납(貢納)을 줄이는 감세정책이다.

대동법이라는 세제로 인해 국민의 조세납부방법은 더욱 편리해졌다. 또한 그로 인해 유발된 방납으로 인한 지하경제규모의 축소와 공인의 상업자본가로의 성장 및 수공업자의 상품생산업자로의 변신은 조선 후기 상품 화폐경제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업 자본주의의 초기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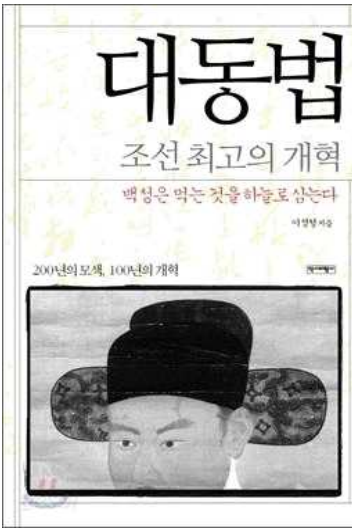
대동법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충분히 조달하면서 경제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잘 조화시킨 효율적(중립적) 조세제도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대동법은 대동사목(大同事目)이라는 세법 운영규정을 두고, 선혜청(宣惠廳)이라는 조세 전담기구를 두어 조세법 전문 공무원이 양입위출(量入爲出)이라는 예산제도에 따라 국가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대동법은 단지 하나의 조세정책이 아니라 현실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 민생을 증진시키려 했던 개혁 담론이었고 시대정신이었다.

대동법은 이정철이 쓴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의 부제인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以食爲天)''와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민생정책이다. 대동법이 바로 이식위천以食爲天 담론을 정책으로 온전히 발현하려 했던 조선시대 개혁 담론이었고 시대정신이었고, 21세기 현대한국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정책담론이다.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以食爲天)'라는 담론은 한(漢)나라의 역사가 사마천(司馬遷)이 쓴 사기(史記)에 '천하에 왕 노릇하는 사람은 백성으로 근본을 삼고, 백성들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王者以民爲天, 民以食爲天)'는 옛말이 있다.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존속할 수가 없고, 왕이 왕 노릇할 수가 없다. 백성들은 먹는 것을 하늘처럼 여긴다. 먹는 것이 국가 존속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사기>에 적시되어 있다.

조선 4대 세종대왕도 1419년에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밥은 하늘로 삼는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세종은 “요즘 수해와 태풍의 재앙으로 인해 해마다 흉년이 들어 가난한 자가 먼저 고통에 처하고, 직업 있는 백성까지도 굶주림을 면치 못하니 너무나 가련하고 민망하도다. 슬프다. 한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된 현상은 부덕한 나로서 두루 다 알 수 없으니, 감사와 수령과 같이 무릇 백성과 가까운 관원은 나의 지극한 뜻을 받아들여 밤낮으로 게을리 말고 백성들이 굶주려 헤매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고, 궁벽한 촌락에도 친히 다니며 두루 살피어 힘껏 구제하도록 하라. 만약 한 백성이라도 굶어 죽는 자가 있다면, 감사나 수령이 교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죄를 논할 것이다”라고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조선 제 22대왕 정조 또한 재위 7년 (1783) 흉년이 들자 3일 동안 감선(減膳)하면서 자신의 정사에 어떤 잘못이 있었기에 가뭄이 들었는지 지적해 달라고 요구하는 구언(求言)을 했다. 정조는 애통했다. “아!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백성은 밥을 하늘로 삼는다(食爲民天). 나의 한결같은 생각은 다만 백성들의 먹을 것에 있다”라고 말했다. 백성은 밥을 하늘로 삼는다.



김육 선생은 오리梧里 이원익(1647-1634)선생이 시도한 삼도(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대동법을 통해 안민부국의 공공의식을 표방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대동법확대 실시에 앞장섰다. 김육 선생은 대동법을 이해하고 있는 이시방을 호조판서로, 충청도 서산 출신인 대동법 지지자인 김홍욱(추사 김정희의 7대조)을 충청도 관찰사로 임명하여 호서대동법을 추진했다. 대동법의 성립은 조익과 이시방 등 전문 기술 관료가 백성을 위한 안민 개혁 정책이 좌초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긴 덕분이었다.

*필자는 왼쪽 사진부터 오리梧里 이원익, 포저浦渚 조익, 잠곡潛谷 김육, 이 세 분을 대동법 3인방이라 부른다.

김육 선생은 당시 민본과 변통(혁신)을 중시하는 실천적 경세가로 칭했던 서인 한당(漢黨)계로 평가된다. 한당(漢黨)의 김육은 산당(山黨)의 사림계열이 실용과 동떨어진 관념에 젖어 있다고 비판하였다. 한당은 한강 주변에 사는 사람을 칭하고 대동법을 찬성하였고 김육과 조익이 대표적이다. 산당은 충청도의 회덕 등 산골 출신의 정치세력으로서 대동법을 반대하였고, 김집과 송시열이 대표적이다. 한당의 구성원은 실무 관료진이자 정객으로 이름을 날린 후손들이 많았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당대 왕실과 혼인 관계도 맺었다. 이들은 정국의 현안마다 다분히 현실을 중요시하는 이른바 '현실론자'들이었다. 반면에, 산당은 조선왕조 건국이념인 성리학을 연구하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자들이었기에 이들은 명분에 죽고 사는 '명분론자'였다.

김육 선생은 당시의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에도 백성들의 복락(福樂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기쁨을 즐김)을 염두에 두고, 국가의 공정성 확립과 민(民)에 대한 배려의 윤리의식이 체화(體化)된 경제 관료다. 김육선생은 '이(理)' 중심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성리학 전통에서 벗어나서 조선의 상황을 매개하고 응용하는 변통 논리를 개발할 것을 주문하였다. "변통이란 지나간 시대의 가치를 가지고는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할 수 없다면 정치 · 사회적으로 오래된 법과 제도를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변통이란 오늘날의 혁신이라는 담론보다 더 강력한 철학적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다.

김육 선생은 '언제나 항상 한결같이' 나라를 풍요롭게 하고, 국민을 편안하고 부유하게 함을 뜻하는 안민부국(安民富國)의 공공의식을 주창하였고, 율곡 이이의 안민 경세론을 완성하였고, 이를 자신이 목격하고 경험한 잠곡 생활을 바탕으로 파탄 난 백성의 삶을 적극적으로 변통(혁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대동법 확대시행, 화폐사용, 시헌력(아담 샬 등이 소개한 서양식 역법) 도입 등을 선제적으로 주도한 경세 변통의 실천적 경제 관료이자 개혁정치가다. 특히 '만물을 사랑하여 사람들을 구제하라'는 애물제인(愛物濟人)의 복락(행복하고 평안한 생활과 기쁨)의 윤리의식을 온몸으로 실천한 조선의 3대 개혁가(정도전, 조광조, 김육)가 가운데 단연 최고다. 잠곡潛谷 김육선생은 '공공성 중심 공공사회'의 귀감(龜鑑)이 되었다.

자네 집에 술 익거든 부디 나를 부르시소
초당(草堂)에 꽃 피거든 나도 자네를 청하옴세
백년간 시름 없을 일을 의논코저 하노라.

-김육(金堉, 1580-1658), 《악학습령》

2023 대한민국 공공성 실천대상

사)한국공공사회학회
www.publicsociety.or.kr

공 모

시민과 함께 공공성을 성찰하고 실천하는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한국공공사회학회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철한 사명감과 남다른 열정으로 실천해 온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자치단체장, 학자, 언론인,
활동가 등을 선정하여**《2023 대한민국 공공성실천대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2023 대한민국 공공성실천대상》에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로가 크신 분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분야

○ 의정 대상 :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 자치단체장 대상
○ 참언론인 대상
○ 실천적지식인 대상
○ 학술상

□ 서류접수기간 : 2023년 10월 20일까지
이메일(publicsociety@hanmail.net)접수

□ 시 상 식 : 2023년 12월 7일(목)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 문 의 : 02-3667-2639

※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공사회학회 홈페이지
(www.publicsociety.or.kr)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상식 관련 심사비·홍보비 및 영상제작비 등
일체 비용청구 없음

www.freepik.com

〔2023 대한민국공공성실천대상〕

■ 2023 대한민국공공성실천대상 수상자의 공공성 실천사례(Ⅰ)

◆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박정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판이 될 평화경제특구법을 대표 발의, 비정규직 근로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입법 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 등 의정활동을 해왔음. 박 의원의 공공성 실천사례와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공공성 실천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 사례

1) 2020.06.01. [2100052]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북한과의 인접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

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자는 것임. 2015년 경기연구원은 평화경제특구 100만평 조성 시 전국적으로 생산 유발효과 9조 1959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조 6018억원, 취업유발효과 7만 2972명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

2) 2020.06.01. [2100059]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2010년 12월 「마을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한 후 2011년부터 본격 추진한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임. 2020년 4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1,629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 19,261명의 고용, 1645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성과를 내고 있고, 10여 개소의 마을기업은 연 매출 20억 원 이상을 올리고 있는 등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하지만, 마을기업에 관한 근거법령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제도적, 체계적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음. 마을기업의 체계적 육성, 안정적 성장 기반을 조성 및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성장,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3) 2020.07.09. [210172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근로자는 안정적 고용상태를 보장받지 못하므로 고용되었더라도 고용된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은 취업할 의사는 가지고 있으나 통상적

조건으로 취업이 극히 곤란하므로 국가가 이들의 취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정책의 수립 · 시행의 기본원칙에서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우선시하도록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건전성을 근로자의 고용촉진 · 고용안정으로 구체화

4) 2020.07.09. [210172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 반지하주택,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지원은 현행법에 따른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되지 않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을 실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이 아닌 곳이나 반지하주택 등 주택이 아닌 곳과 유사한 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

5) 2020.08.20. [2103118]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민 누구나가 지역 단위에서 손쉽게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스포츠클럽을 조성하고, 스포츠클럽을 통해 전문선수가 발굴되고, 은퇴선수 등 체육인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

6) 2020.12.09. [210627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아 심리적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특수건강진단 시 정신건강진단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장애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시 대면(對面)상담 등 정신질환적 징후 발견에 효과적인 검사 항목으로 구성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7) 2021.03.19. [2108963] 스포츠기본법안

스포츠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스포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기본법으로서의 법률 체계를 구성

2. 시민과 함께 파주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한 사례

파주 군사시설 보호구역 '18~'22년간 21.37㎢(축구장 약 3천개 규모)해제함. 파주는 약 70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면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야만 했음. 이제는 파주시민들께 특별한 보상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라는 성과를 이루어냈음. 특히, '16년부터 파주시민과 소통하며 '미군반환공여지 활용' 관련 긴급토론회를 여는 등 노력을 했음

3. 지역사회복지 구현 사례

1) 도로·교통

약 3.4조원 예산을 들여 사통팔달 도시 파주를 만드는 데 힘썼음.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김포~파주~포천)(총사업비 2조7,747억원) △국지도 78호선 선유리 국간 확장(총사업비 236억원)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 확

장(총사업비 30억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총사업비 5,683억원) △국지도 78호선(문산~법원) 4차선 도로확포장(설계비 2억원) △서울~문산 고속도로 금촌나들목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총사업비 58.2억원) △문산-도라산 전철(총사업비 388억원) △경의선 운천역 건립(총사업비 105억원) △3호선 파주(금릉)연장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포함 등 10대 성과는 파주시민은 물론 파주 방문객에게도 편리하고 깨끗한 교통환경을 제공함

2) 체육

파주읍 문화체육센터('20.08.개관),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22.10.개관), 문산 청소년 수련관('23.11. 준공 예정) 등 수영장이 있는 체육관이 파주시을 지역에 2개나 생겼고 1개는 공사 중임. 파주시을 지역에는 수영장이 단 한 개도 없었음. 2016년 총선 당시 파주시민들께 좋은 수영장을 꼭 만들겠다고 약속한 후 이루어낸 성과임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파주시가 '23년 선정됨.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통합 체육시설임. '20~'22년 중순까지 제21대 국회 상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아 체육 관련 전문성을 높였고, 반다비 체육센터 유치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쳐왔음. '23년도에 설계비 명목의 국비 2억 원이 지원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음

학교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이 '20~'23년까지 총 13곳이 개관했음. 실내체

육관이 없는 학교에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주민의 생활체육 공간 제공을 위해 파주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을 직접 찾아다니며 만들어낸 성과임

인공암벽장 건립을 위한 ’23년도 예산에 국비 10억 5천만원이 확정됨. 국제규격 인공암벽을 파주에 만들어 국제대회 개최 및 클라이밍 운동 저변확대 등 산악회원들을 위해 만들어낸 성과임

금촌 배드민턴 전용구장·테니스장 막 구조물 설치, 문산 탁구장 개보수 등 총사업비 약 60억원으로 파주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힘씀

3) 교육·문화

문산 거점도서관이 ‘25년 준공· 개관 예정임. 국비 20억원(’21년도 예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원(’22년도 예산)을 확정시키는 등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시설 설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음

음악 전용 공연장 파주 건립을 위한 ’23년도 예산에 국비 30억원이 확정됨. 파주시민의 문화향유 욕구 충족 및 수준 높은 기획공연 제공을 위해 문화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기획재정부에 제안해 만들어낸 성과임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 센터건립을 위한 ’23년도 예산 국비 40.6억원 등 총사업비 303억원을 들여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역주민과 군

장병이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힘씀

4. 마을만들기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례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은 금촌통일시장 주차장(총사업비 49억원) △문산자유시장 문화관광형시장(총사업비 18억원), 적성전통시장 지원(총사업비 6억원), 광탄경매시장 주차장(총사업비 30억원) 등 상인회 등 지역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5. 기타

방호벽 철거 및 정비 3개를 완공함. △문산제일고 앞 방호벽 철거('20)(총사업비 37억원) △월롱면 도내4리 방호벽 정비('19)(총사업비 5.33억원) △월롱면 영태2리 방호벽 정비('19)(총사업비 3.06억원) 등 미관개선 등 시민을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함

전선 지중화 사업 3개를 추진함. △'20년 금촌 명동로, 문화로 전선 지중화 사업 완료(약 16억원) △'20년~ 문산 문향로, 문산로 전선 지중화(약 36억원) △'23년~ 연풍·법원 그린뉴딜 전신주 지중화(총사업비 141.34억원) 등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힘씀

◆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 납품단가연동제법, 용수시설구축문제, 공공형 노인일자리, 경로당 냉난방비용 상향,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및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음. 성 의원의 공공성 실천사례와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첫째,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공법단체 승격 및 단체회원 자격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민간단체인 5.18 관련 3개 단체를 보훈처 소속의 공법단체로 승격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5.18유족회가 주관한 추모제에 정운천 의원과 함께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초대받음. 이후 제1회 5.18민주대상을 수상함.

둘째, 경제단체와 당내 반대도 굉장히 심했으나 '약자'일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납품단가연동제법'을 통과시킴. '약자'일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관철시킴.

셋째, 120조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용수시설 구축 문제를 놓고 인근 여주시와의 갈등으로 인허가 협의가 지연돼 국가의 핵심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있었음. 이에 관계부처와 여주시,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당정회의'를 가동해 여주시와 용인시, 기업들 모두 상생협력할 수 있는 대타협을 이루어냈고, 이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상추진됨.

넷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22.5.17),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22.9.28) 노인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대한노인회와 정책간담회(22.11.7), 중증·희귀질환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22.11.21) 등 총 35회 정책간담회 및 당정협의 개최

다섯째, 공공형 노인일자리 총 60.8만개 확보, 경로당 냉난방비 연 250만원으로 상향,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280억원 신규반영, 고금리 대출 부담 완화 368억원 추가 출자,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증액, 0~2세 기관보육료·장애아 보육료 총 5%인상 등

◆ 경기도의원 정윤경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아동, 청소년의 돌봄과 관련 종사자에 대한 조례 제정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동촉진에 대한 조례개정 등 경기도 여성가족정책과 관련한 입법 및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의 돌봄과 관련 종사자에 대한 조례 제정

1) (전국최초)경기도 아동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23.3.3.)

〈표1〉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 내용, 제정노력, 기대효과

	내 용
제안이유	● 아이돌봄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로 인해 종사자의 잦은 이직과 경력자의 이탈로 이어져 결국 이용 아동들의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운 돌봄 환경으로 직결됨 ●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비해 열악한 실정에 처해있는 아이돌봄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아이돌보미와 육아도우미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아이돌봄종사자의 노동환경 보장
주요내용	●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계약실태, 계약조건, 근로환경 등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

	● 아이돌봄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정노력	● 전국돌봄서비스노조 경기지부장 간담회('22. 12. 5.) ● 관련부서 의견 협의 : 입법정책담당관('23.1.20.), 경기도 아동돌봄과('23.2.1.) ● 입법예고 : 의견 2건('23.3.8.~14.)
기대효과	● 아이돌봄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던 육아도우미를 지원대상에 포함 ● 아이돌봄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확장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한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권익향상 ● 경기도 내 돌봄서비스의 안정적 지원

〈표2〉 아이돌봄종사자 관련 사업 : 3개 사업, 105,958백만원

사업명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
사업비	104,793,230천원 (국70%, 도15%, 시군15%)	144,375천원 (도30%, 시군70%)	1,020,000천원 (도30%, 시군70%)
사업내용	양육공백이 발생한 생후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 돌봄서비스 제공	아이돌보미 독감예방	만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추가 수당 지원

2)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23.4.10.)

〈표3〉 본 조래안의 제안이유, 주요 내용, 제정노력, 기대효과

	내용
제안이유	● 방과 후 활동은 아동 등의 사회적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은 물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원활함과 지역 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상위법 및 조례가 없음 ● 방과 후 활동 종사자의 경우 근로 환경이 열악하여 방과 후 활동 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바 처우개선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
주요내용	●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방과 후 활동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함 ●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업의 종류를 규정함 ● 방과 후 활동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규정함 ● 방과 후 활동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함
제정노력	● 입법공청회개최(2023. 4. 6.(목) 17:00) : 방과 후 활동 종사자에 대한 명확한 대상 특정 필요,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 설립, 제안, 방과 후 활동 종사자를 위한 고충처리 위원회 설치 제안 등 ● 관련부서 의견 협의 : 입법정책담당관('23.3.30.), 경기도 아동돌봄과('23.4.10.) ● 입법예고 : 의견 1건('23.4.7.~13.)
기대효과	●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돌봄· 보호· 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방과 후 활동 관련 사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

〈표4〉 방과 후 활동 사업 : 2개 사업, 11,540백만원

사업명	지역아동센터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사업비	9,215,712천원(도100%)	2,324,023천원(도100%)
사업내용	지역아동센터 업무경감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처우개선비 아동 체험활동비 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인력 및 프로그램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지원

3) (전국최초)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23.8.25.)

〈표5〉 본 조래안의 제안이유, 주요 내용, 제정노력, 기대효과

	내용
제안이유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2006년 도입된 이래로 지역사회 및 청소년 시설 등에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인역량개발 등 돌봄을 제공해 지역 내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서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 발들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견인 ● 2021년 12월 '지방자치단체 경기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지방정부의 권한 및 책임이 확대됨 ● 경기도 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활성화 및 체계적인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근거 규정을 마련
주요내용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마을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방과 후 전인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함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네트워크 구축 및 종사자 교육 및 훈련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정노력	● 입법공청회 개최(2023. 8. 8.(화) 14:00):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임금 수준 상향, 경기도의 특색있는 방과후아카데미기능 추가, 학부모 등 민원인으로부터 종사자 보호, 종사자의 장기근속 환경 마련 등 ● 관련부서 의견 협의 : 입법정책담당관('23.7.4.), 경기도 청소년과('23.7.18.) ● 입법예고 : 의견없음('23.8.16.~22.)
기대효과	● 경기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아카데미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의 안정적인고 체계적인 추진에 기여 ● 핵가족화· 여성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등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방과 후 나홀로 방치되는 청소년에 대한 돌봄이 강화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조례명으로 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전국 지자체의
관련 정책 및 예산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1개 사업, 11,035백만원(국 50%, 도25%, 시군25%)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 사 업 량 : 25개 시군 63개소(기본형51, 농산어촌형7, 장애3, 기타2)
- 사 업 비 : 10,035백만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 다자녀· 맞벌이 가정의 초4~중3학년(또는 연령)
- 지원내용 : 주5~6일, 급식, 상담, 진로체험, 동아리 등 학습 지원 등 돌봄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 2022년 실적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24개 시군 58개소 운영, 2,315명 이용

〈표6〉 운영 유형별 정원 및 지원단가

구 분	1개반(30명)	2개반(40명)	3개반(60명)	비고
기본형	119,226	178,062	250,808	
농산어촌형	122,676	183,102	257,458	
장애형	–	150,402	210,708	1개반(10명)
다문화형	–	163,102		1개반(15명)
탄력운영형	72,872	-	-	1개반(15명)
주말형	47,002	-	-	1개반(30명)

2.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동 촉진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

〈표7〉 〈전국최초〉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3.4.10.)

	내 용
제안이유	● 현행 경기도 조례는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또는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는 “경제활동 및 경력이 연속되지 아니하는 상태”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경력보유”로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명을「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수정함 ●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수정하는 등 용어를 변경함 ● “경력단절 예방”을 “경력 유지”로 수정하는 등 용어를 변경함
제정노력	● 입법공청회 개최(2023. 1. 27.(금) 11:00):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여성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방안 필요 등 ● 관련부서 의견 협의 : 입법정책담당관('22.11.11.), 경기도 고용평등과('22.11.24.) ● 입법예고 : 의견 1건('23.1.9.~13.)
기대효과	● 기존「경력단절여성법」이 야기한 정책적 한계와 문제점을 타파하고,「여성경제활동법」과 현행 조례의 입법 목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조례 내 반영하고,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범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재가치화에 일조

◆ 경기도의원 김규창

김규창 경기도의원은 2014년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경기도의회 제9대·제10대의원을 역임한 후 2022년7월1일부터는 3선의 제11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 속에 도민의 충실한 심부름꾼으로 재직하며 아래와 같은 공적이 있음

□ 경기도의회 입법활동을 펼쳐 조례 제·개정 대표발의 10건, 조례 제·개정 공동발의 150건 등 총165 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음. 특히, 보도 없는 지방도의 문제점 부각과 교통사고 다발지역·횡단보도·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조명시설의 우선적 설치근거를 마련한 사실이 있음.

□ 기타의결 활동으로 결의안 및 건의안 18건의 안건을 공동채택.

□ 도정질의를 3회 25개분야에 걸쳐 도지사·부지사·교육감에게 질의하므로써 경기도정의 사각지대를 파고들며 도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행정처리를 요구.

□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모금운동 참여, 인구 절벽 극복방안 정책토론 대축제 주관, 공감하는 챌린지 참여 등 다방면에 걸쳐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며 경기도의회 여주상담소를 통하여 약 215건의 민원상담을 추진, 민원 애로사항 해결의 의정을 도모.

□ 여주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 숙원사업 43건 2,067억원 투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44건 350억원, 여주~원주 복선전철 강천역 신설과 광주·이천·여주·원주 GTX 노선확충을 위해 노력.

□ 여주시 교육분야 투자사업으로 7개분야 661억원 확보 추진.

1.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경기도민 삶의 질 개선

2014년 9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간사로서'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상충되는 요소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제하고 지원하는 의정활동과 이상기온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과 함께 유해화학물질 안전 방안을 모색하며, 도시 및 환경분야에서 주민의 삶 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2.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

2016년 9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간사로 지방도 실태 및 지방하천 실태에 대한 도정질의를 통하여 보도없는 지방도의 개선,농촌지역 폐비닐 수거와 처리실태의 문제점 지적과 개선책을 촉구하였으며, "경기도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분에 관한 조례개정"과 "경기도 운수 종사자 연수기관지정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였습니다.

3. 코로나 전후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현장과의 소통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경제투자실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코로나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고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선제적이며, 체계적이며 지역맞춤형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

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경기도 전통시장의 침체 극복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와 골목상권 상인회와의 정담회를 개최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영난 해소와 활성화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경기도와 여주시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경기도내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사회공헌, 지역사회기여, 친환경경영, 소비자보호, 윤리적조직문화 조성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착한기업 인증조례의 발의를 하였습니다.

4. 조례 제·개정현황

	조례안
《 11대 경기도의회 : 22.7월 ~ 》	▪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3.3.)
《 10대 경기도의회 18.7월 ~ 22.6월》	▪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1.12.01.) ▪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07.02.) ▪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2021.05.28.) ▪ 경기도 하천 · 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2021.05.28.) ▪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10.23.) ▪ 경기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2020.09.25.) ▪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04.06.) ▪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03.26.) ▪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06.28.) ▪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09.28.)
《 9대 경기도의회 14.7월 ~ 18.6월》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09.29.) ▪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및 운영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7.03.31.) ▪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10.31.) ▪ 경기도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2016.06.03.) ▪ 경기도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04.29.)

	▪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01.04.) ▪ 경기도 생물성연소 배출원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5.10.123) ▪ 765kv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건설사업 후보지 철회 촉구 결의 안(2015.05.07.) ▪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09.26.)

◆ 충남도의원 이연희

이연희 충남도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에서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정 견제 및 감시는 물론 유기적 협력을 통해 도민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공공성 실천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이연희 충남도의원은 제7대~8대 서산시의회 의원, 제8대 서산시 의장을 거쳐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및 예결산특별위원회 등 각종 특위 위원으로 충남도와 도민을 위해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5분 발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등의 활동을 하며 공공성 실천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추천하며 그 공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성 실천을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

2022년 7월부터 충청남도의회 도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하며, 대표발의 7건, 공동발의 84건, 5분 발언 4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3건, 건의안 2건 등 충청남도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강화로 중앙정부의 정책 사각지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남도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은 물론 도민의 권익신장을 위한 조례안 제·개정을 통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입법 활동에 앞장서고 있음

이외에도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 농어업종사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 등 노동자, 어르신,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안 추진에 힘쓰고 있음

2. 조례안과 관련보도

	내 용
[조례안]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밖에도 여성,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조례 제·개정 추진 중임
[관련 보도]	-충남도의회,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지원 근거 마련, 충청-일보 (2023.02.07.) -이연희 충남도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해야!, 충남신문(2023.02.06.)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예고, 충청뉴스 (2023.03.27.) -충남 서산개척단 피해자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서울신문 (2023.07.26.) -충남도의회 지속가능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구축 (2023.08.30.) - 충남도의회, 효 문화 확산 위한 효행 우수자 예우 근거 마련 (2023.08.31.)

◆ 광주시의원 황소제

황소제 의원은 제8대와 제9대 광주시의회 시의원(다 선거구)으로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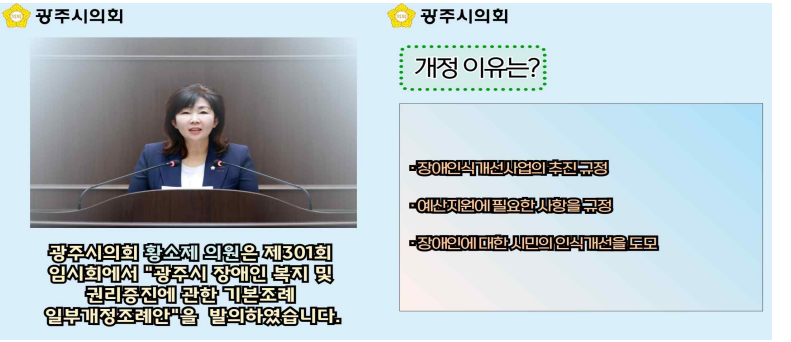
1. 공공성 실천을 위한 입법 활동 전개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은 언제나 항상 공공성 실천을 위하여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에 관심을 크게 두고, 지역 의원으로서 관련 현안 사항을 공론화하고 입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음. 특히,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시선과 편견들이 사라지고 사회적으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 3년간 입법 활동 현황 〉

발 의 일	의 안 명	비 고
계	총 10건	
2020. 11. 17.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대
2020. 11. 17.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 01. 22.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 03. 05.	광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1. 08. 30.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022. 12. 07.	광주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대
2023. 01. 27.	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023. 04. 07.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 05. 23.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 08. 25.	광주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제30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입법활동 사진

2.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지역현안사항 해결

황소제 의원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지역 내 현안사항을 정확하고 엄밀하게 파악하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의정 활동으로 각종 지역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음. 특히 의정활동의 기본은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직접 대화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황의원의 의정 철학이며, 각종 정책 결정 시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찬/반 의견을 충분히 개진

할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의원으로 유명함.

2023. 7월 중 지역주민 간담회 사진

3.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 수행

황 의원은 투철한 사명과 남다른 열정으로 시민을 대신하여,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의정활동에 항상 노력하고 있음. 현장감 있는 민의 수렴으로 의정・시정 운영의 감시자로서의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황 의원은 제9대 의정활동 중 능평초 주변 도로계획 추진, 오포 교통체계 개선, 오포터널 보행안전 개선대책 촉구 등 시정질문을 날카롭게 하는 것으로 유명함. 특히 지난 제30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4년 4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있는 문형지구 진입도로 기반시설의 현실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공

공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역발전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제9대 의정활동 중 시정질문 현황 〉

구 분	내 용	비 고
제298회 정례회	도로계획 추진 및 오포책임동제에 따른 행정서비스 강화 촉구	
제300회 임시회	오포 태재고개 교통체계 개선과 오포터널 보행안전 개선대책 촉구	
제302회 정례회	멈춰버린 4년4개월: 공사중단된 문형지구 진입도로 기반시설 대책방안 촉구	

제30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사진

◆ 용인특례시의원 유진선

유진선 용인특례시의원은 2004년부터 지역활동을 시작하여, 용인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상임대표), 용인 친환경무상급식 운동본부 공동대표,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공동대표 등 용인지역에서 풀뿌리 NGO 활동을 지속적으로 활동하였음.

유 의원은 그 후 용인시의회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후, 지역공동체 실현 및 풀뿌리 지역의 실질적 민주주의 확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 확대, 공공성 실천 등을 위한 조례 대표발의 및 제정 그리고 개정 등을 통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해왔음.

유 의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지향하여 시민간담회(주민간담회)(용인경전철 스크린도어 설치 시민간담회, 용인시 난개발 실태 점검 및 대안 모색 긴급 간담회, 용인경전철바로알기 시민강좌 참여 '경전철 재계약 이대로 좋은가',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급식 대공청회 패널 참여 등등)를 다수 개최 또는 참여하였고, 견제와 감시로 예산낭비 막는 데 앞장서 왔음.

유 의원은 용인경전철 적폐 및 불평등 협약등을 집중 연구하였고, 그로 인한 시정질문, 5분 발언등을 통해 7년간 약 350억원, 금리재구조화로 약 460억원 예산 절감하는 데 앞장섰음.

유 의원은 늘 공부하고 현장을 챙기며 대안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의회상 구현을 위해 동료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의원연구모임 활동을 해왔으며(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유니버설디자인, 문화재생, 용인지역만세운동 등을 주제로 함), 그 결과 입법활동으로 성과를 이루었음.

유 의원은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경기도에서 2위로 많은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토론회 및 조례 대표발의 및 제정, 고3 무상급식 확대 노력,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개선, 교육 및 주거환경을 위협하며 도시숲 파헤치는 난개발 방지 노력, 학부모들과 함께 흥덕 샘말초 신설 개교 쟁취, 서천동 도서관 분리 건립 쟁취 등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용인시의회 모의의회 체험을 통한 청소년들의 민주적 리더쉽을 기르는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조례도 제정하여, 경기도의 31곳 시.군 의회중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유 의원은 용인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용인시 3.21 만세현장인 원삼면 좌찬고개에 용인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인시 청년공간이 전무한 가운데,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례를 만든 결과, 현재, 용인시에는 용인청년공간 LAB이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에 3곳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또한, 용인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대표 발의 및 제정(전부개정)하여 용인시 민주시민교육센터도 만들어졌음.

■공공성 실천을 위한 법. 제도적 정비(조례 대표 발의 중심으로)

- 용인시 스토킹 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제정)
- 용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조례(대표발의/제정)
- 용인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대표발의/제정)
- 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대표발의/제정)
-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대표발의/일부개정)
- 용인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조례(대표발의/제정)
- 용인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대표발의/제정)
-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조례(대표발의/제정)
-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대표발의/일부개정)
- 용인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관련 조례)
(대표발의/전부개정
-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대표발의/일부개정); 대안학교 학생(학교밖학생)들에게도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조례 개정함

※ 2023 대한민국공공성실천대상 수상자인 세종시장과 부천시장, 전남도의원, 경기도의회의장, 한국도자재단 이사장들의 실천사례는 2호에서 소개하겠습니다.

■ 2023 대한민국공공성실천대상을 여는 사람들

1) 심사위원

	이름	소속	학위
위원장	이용을	한국공공사회학회	철학박사
위원	김혜겸	변호사	건설법무학박사
위원	서운석	보훈교육연구원	행정학박사
위원	정윤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학박사
위원	김상돈	고려대 교육대학원	사회학박사

2) 준비위원

	이름	소속
위원장	오산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진현주	빅식스방과후교육연구소
위원	최현주	한국문화교육연구원
위원	추철호	동두천시 체육회장

■ 2023 대한민국공공성실천대상 수상자들

≪월간 공공성≫ 창간호(통권 1호)

2023년 12월 15일·인쇄

2023년 12월 15일·발행

발 행 처: 소통과 공감

발행학회: 사단법인 한국공공사회학회

디 자 인 : 유세희, 진현주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동 1591-3(반포대길 14길 27) 탑스벤처

전　　화 : 02-3667-2639

이 메 일 : publicsociety@hanmail.net

홈페이지 : http://www.publicsociety.re.kr(한국공공사회학회)

http://www.mpublicness.com(월간공공성)

※ 저작권자와의 협의 아래 인지는 생략합니다.

값: 12,000원

ISBN : 979-1185333-27-4(전자책)

ISSN : 3022 - 0572

월간 공공성

Monthly Publicness

979-1185333-27-4

ISSN:3022-0572

가격 : 12,000원